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우리의  
지속가능한

# 교육의 평화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성경 이성훈 이재영 이항규 경성한 김명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우리의  
지속가능한

# 교육의 평화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성경 이성훈 이재영 이항규 경성한 김명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16

## 우리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 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 은 이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항규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김명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편 집 | 김은영 김명신

구술정리 | 형은경

펴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 낸 이 | 김광호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 화 | 02-6958-4164

팩 스 | 02-6958-4250

전자우편 | [science@unesco.or.kr](mailto:science@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교 열 | 김보람

디 자 인 | 디자인프리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SC-2019-BK-5



## SDGs 해설서 시리즈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는 전 세계의 빈곤 종식과 평화유지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습니다. SDGs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며,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SDGs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SDGs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나 관심은 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SDGs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이름 아래 SDGs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일려두기

-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Ⅰ 차례

- 06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현장 전문
- 08 머리말
- 1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16의 의미와 과제
- 45 분단의 마음, 평화의 마음
- 69 경계를 넘는 삶과 인권
- 85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의
- 107 생명, 평화, 통일
- 1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헌장 전문

1953. 7. 6 공포  
조약제26호  
제정 1945. 11. 6  
발효 1946. 11. 4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 상호간의 생활양식과 삶에 대한 무지는 사람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을 가져온 공통적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상호간의 차이점들이 너무도 자주 전쟁으로 이어져왔다.

이제 막 끝난 가공할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신 무지와 편견을 통해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발생된 사건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관심과 협력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오로지 정부 간 정치적·경제적 타협에 근거한 평화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를 창설한다.

## I 머리말

21세기를 맞으며 야심찬 각오를 담았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종료된 2015년, 국제사회는 긴 타협과 논쟁 끝에 유엔 총회에서 MDGs의 뒤를 이을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합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절대빈곤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MDGs에서 한 발 더 나아가, SDGs는 미래를 내다 보며 경제, 사회,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발전’ 개념과 다른 ‘지속가능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SDGs는 그 방대한 범위와 모호함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SDGs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그 내용이 꽤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국내에서 SDGs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SDGs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SDGs는 우리 일상과 무관한 거창한 목표나 일부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행에 동참할 수 있는 목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 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줄여 SDG 10번(불평등 감소)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생태친화적인 생산물을 소비하며 쓰레기를 가능한 한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함으로써 SDG 12번(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SDGs에 대한 이해는 SDGs 달성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SDGs 중 14번(해양생태계)과 16번(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목표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합니다. 14번 해설서인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우리의 지속가능한 해양』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즈음 놓치지 말고 짚어야 할 화두를 던져줍니다. 또한, 16번 해설서인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우리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더욱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게 낫설지 않은 이 두 주제를 통해 SDGs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우리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설서의 발간을 위해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주신 전문가 여러분에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16의 의미와 과제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SDG16의 핵심은

**평화(Peace), 정의(Justice), 포용(Inclusiveness)**입니다.

SDG16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결과입니다.

SDG16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SDGs 전체를 달성할 수 없으며,  
SDGs가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유엔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우리 세계의 변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함께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담긴 문서입니다. SDGs가 지향하는 미래 세계의 비전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세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세계로 요약됩니다. 국내외 불평등과 양성 불평등, 청년 실업, 극단주의와 테러, 강제 이주, 자연재해, 질병, 천연자원 고갈과 사막화, 물 부족,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과제가 17개 목표에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SDGs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성훈** SDGs는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처한 위기의 임계점을 늦춰서 더 악화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SDGs를 모든 나라가 100%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구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SDGs가 인류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김명신** 임계점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마주한 도전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17개의 목표들을 알아야겠지만, 모든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7개 목표를 쉽게 외우는 재미있는 공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훈** SDGs의 17개 목표는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공통의 언어입니다. 확실히 외워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각 목표의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SDG 1~5의 키워드를 확인해볼까요. SDG1은 빈곤, SDG2는 기아, SDG3은 건강, SDG4는 교육, SDG5는 성평등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만들어볼까요?

“나는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교육도 못 받아서 성평등 개념이 없습니다.”

말이 되죠? 그 다음 SDG6은 물, SDG7은 에너지, SDG8은 일자리, SDG9는 산업화, SDG10은 불평등인데요. 이걸로 스토리를 만들면,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에너지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산업화에 기여했더니 불평등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SDG11은 도시화, SDG12는 과잉생산, 소비, SDG13은 기후변화, SDG14는 해양, SDG15는 육상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불평등이 감소되어) 도시에 가서 살았더니 너무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물과 땅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SDG16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SDG17은 국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DG16과 SDG17은 SDG1~15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죠.



“SDG1~15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한 이행 수단이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SDG 17개의 키워드를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로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교육도 못 받아서 성평등 개념이 없습니다.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에너지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산업화에 기여했더니 불평등이 감소했습니다. (불평등이 감소되어) 도시에 가서 살았더니 너무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물과 땅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SDG1~15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한 이행 수단이 필요합니다.”

**ㅣ김명신** SDG 17개 목표가 사실 금방 외우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로 들어보니 재미있고 기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SDG 17개 목표는 주제와 특징에 따라 다른 식의 분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I 이성훈** SDGs의 17개 목표는 5개의 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P'입니다.

우선 SDG1 빈곤, SDG2 기아, SDG3 건강, SDG4 교육, SDG5 성평등은 사회개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5P 중 '사람(People)'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G8 일자리, SDG9 산업화, SDG10 불평등, SDG11 도시화, SDG12 생산 및 소비는 경제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번영(Prosperity)에 해당하죠. SDG6 물, SDG7 에너지, SDG13 기후변화, SDG14 해양, SDG15 육상은 환경 관련 목표이므로 지구(Planet)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SDG16은 평화(Peace), SDG17은 협력(Partnership)입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SDG1부터 SDG15까지는 경제·사회적 권리와 환경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SDG16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SDG5는 양성 불평등, SDG10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SDG16은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김명신**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SDG16이 SDGs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SDG16이 SDGs 안에 포함된 의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SDG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권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SDG16의 세부목표는 부록 참조

**이성훈** SDG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면 안보, 인권, 개발, 환경의 이슈를 하나의 틀로 묶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UN의 주요 의제인 안보, 개발, 인권은 그간 각 이슈별로 따로 논의되었는데, SDG16이 SDGs에 포함되면서 평화에 대한 논의가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권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라는 SDG16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SDG16은 타이틀이 ‘평화’이고, 핵심적인 목표는 평화(Peace), 정의(Justice), 포용(Inclusivenes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SDG16 자체가 SDGs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결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SDG16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SDGs 전체가 달성이 안 되고, SDGs가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가 더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용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DG16은 17개 SDGs 중 하나지만 SDGs 전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SDG16을 좀 더 쉽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P.H.D.'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세 가지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Peace)는 폭력(Violence), 인권(Human rights)은 정의(Justice), 그리고 민주주의(Democracy)는 참여(Participatio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SDG16의 세부목표 중에서는

**SDG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16.1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은 차별과 같은 말입니다. 차별의 극단적 형태

가 폭력이죠. 차별은 말로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와 폭력을 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폭력이 최악의 형태의 인권 침해라는 뜻이죠. SDG16은 '아동폭력, 가정폭력, 이주민에 대한 폭력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김명신** SDG16이 포함되면서 평화에 대한 논의가 SDGs에 통합된 점은 분명히 평가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에서 매우 중요한 군축 이슈를 SDG16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뜻밖입니다.

**이성훈** 사실 SDGs 논의 초기에는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평화군축의 네 가지 축이 논의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군축’이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SDGs에는 ‘국가 간 평화’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가 내 폭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축이 제외된 이유는 UN 상임이사국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독과점 체제와 같습니다. 평화 문제는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문제와 평화, 안보 문제를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김명신** 군축 문제가 빠지면서 SDG16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16이 SDG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SDG16에 군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의사결정(16.7)에 대한

**SDG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부목표 속에 균축을 집어넣으면 ‘국방비에 대한 투명성 있는 의사결정’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DGs에 대해 선의를 가진 나라라면 현재 수준에서도 많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때는 적극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죠.

SDG16의 이행은 결국 정치적인 의지(Political will)의 문제이자, 각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SDGs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서서 ‘왜 안 하느냐’고 촉구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 김명신** SDG16에는 평화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DGs 논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SDG16이 현재의 내용으로 SDGs에 포함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 이성훈** SDG16은 큰 틀에서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새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 대한 평가에서 “아무리 원조가 많아도 거버넌스가 부실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혹시 MDG9이라고 들어보셨나요? MDGs 시절 몽골 정부는 자국의 경험

에 비추어 민주주의와 인권 없이 MDGs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MDG9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MDG9에 포함된 내용이 현재 SDG16의 반부패(16.5), 민주주의(16.6) 등과 같습니다. SDG16은 새로운 게 아니라 ‘개발은 거버넌스 없이 안 된다’는 상식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SDGs에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가 들어가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관련해 반복해서 나오는 논쟁도 같은 맥락입니다.

**SDG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SDG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SDG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 ‘왜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진국들은 ‘부정부패 때문’이라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 등의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책임전가 때문’이라고 하죠.

SDG16에 거버넌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게 된 배경은 매우 독특하게 진행된 SDGs 협상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합의된 목표를 만들 때는 ‘빼기(-)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든 나

라들이 자신이 싫은 것은 되도록 빼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집어 넣으려고 하죠. 그렇게 서로 반대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선언문이 그런 식으로 알맹이가 모두 빠져 나가면서 최소주의(minimalism)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SDGs 협상은 최대주의(maximalism)으로 갔습니다. SDGs 논의 당시 분위기는 내 의견을 집어넣고 싶으니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였고, UN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에는 난민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메르켈 총리가 있었죠. 이들의 리더십이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SDG10(불평등)의 내용 가운데 국가 간 불평등이 들어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선진국은 SDG10(불평등)에 국가 간 불평등(among country)을 포함하는 걸 받아들이고, 대신 개발도상국은 SDG16의 거버넌스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지금의 SDG16이 SDGs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신** SDGs 협상이 최소주의가 아닌 최대주의로 진행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SDGs 목표들을 보면 대부분 각각의 목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SDG1(빈곤퇴치)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SDG4(양질의 교육)는 유네스코(UNESCO)가 주도하듯 SDG16도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이성훈** SDG1부터 SDG15까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각 목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하나씩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SDG16은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대신 ‘친척’만 많죠. SDG16은 자체가 여러 목표를 포괄하고 있어서 특정 기구가 전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MDGs 시절에는 MDG의 목표에 포함되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를 본 국제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SDGs의 특정 목표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SDG16은 그런 국제기구가 없었습니다. SDG16 안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한 기구가 SDG16 전체를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나 SDG16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명확한 담당 주체는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명신** 명확한 선도기관이 없어 안타깝지만 SDG16이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구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꾸어서 한국사회와 SDG16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SDG16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성훈**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SDG16이 어째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가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안 된다’는 것을 한국이 역사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SDG16를 한국적 맥락으로 해석하면, 평화는 ‘분단’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은 소극적 평화, 즉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을 넘어서는 적극적 평화로 가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는 분단 구조를 넘어서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평화는 번영의 전제조건이며, 번영할 때 평화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는 2가지 맥락이 중요합니다. 바로 ‘누구’의 ‘어떤’ 인권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부터 돌봐야합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문제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주자의 노동력과 출산을 원하면서도 그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죠. 난민, 이주민, 탈북자, 성소수자들과 어떻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SDGs에 담겨 있는 ‘모두(for all)’의 의미는 결국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참여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이분들은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아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정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기후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국회의원의 30%만 돼도 기후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실업, 출산,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SDG16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는, 한국적 맥락에서 분단, 소수자, 참여라는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신** 평화를 분단의 키워드로 바라보는 것은 의미 있겠지만, 우리의 사고가 물리적·정치적 분단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다양하게 파생되는 정서적·관계적인 폭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성훈** 물론입니다. 분단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분단 구조가 우리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나누고 적을 만들고, 불안하니까 내 것만 챙기고, 이념적 프레임을 씌우고... 폭력으로 그런 마음과 행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있는 분단 구조에 의한 폭력의 문화를 상세하게 찾아내고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단 극복일 것입니다.

**김명신** 2015년 SDGs가 발표되고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내 차원의 SDGs 이행 현황은 어떤가요?

**이성훈**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SDGs가 만들어질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이 UN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외적으로 SDGs를 위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차원에서는 작년 국무회의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통과되었습니다. K-SDGs에 따르면 SDGs의 17개의 목표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169개의 세부 목표 중에서 대부분을 한국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해 약 122개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지표 232개를 214개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정부도 국제적인 의제를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SDGs가 한국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지 않지만, SDGs를 잘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SDGs가 공공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결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DGs는 공공외교 영역, 평화외교 영역,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국내의 분절화된 인권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신** 앞으로 SDGs, 특히 SDG16의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이성훈**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하는 SDGs가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국방과 같은 거시 정책을 담당하고 있

**SDG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력 및 고문을 증식한다.

**SDG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16.5.** 모든 형태의 부정 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SDG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SDG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SDG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SDG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지 않는 대신 일상적인 정책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SDGs의 제는 지방정부와 연결점이 더 많고, 지방정부에서 정책화하여 실행될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SDGs의 지역화(Localizing SDGs)', 즉, 지방 차원에서 SDGs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는 SDG16이 국가가 담당할 영역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SDG16.1 '폭력', SDG16.2 '아동폭력', SDG16.5 '반부패', SDG16.6 '제도'와 SDG16.7

'의사결정', SDG16.9 '아동인권', SDG16.b '비차별'은 지방정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사고를 확장시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마을(village), 직장,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SDGs를 실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SDGs에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DGs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각 주체별 맥락에 따라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실천 과정을 자꾸 만드는 것이 필

요합니다. SDGs는 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 혹은 학급 단위에서 SDGs 실천계획을 만들어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김명신** 국내외적으로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SDGs는 향후 남북협력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북협력을 이야기할 때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북협력 과정에서 SDGs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성훈** SDGs는 남북협력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남북 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남북이 바로 협력하게 되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의 중간, 평균을 잡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SDGs의 어떤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이슈이고, 어떤 목표는 비(非)개발도상국의 이슈입니다. 따라서 SDGs를 활용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노력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SDGs는 유용합니다. 북한도 UN과 합의한 SDGs 이행계획이 있고, 언젠가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세계은행이나 IMF를 끌어들여 개발에 도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SDGs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국제기구가 SDGs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SDGs를 이행하지 않으면 논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북협력의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한 민족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SDGs라는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의 달성을 위해 남과 북이 힘을 모으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SDGs를 활용하게 되면 국제사회나 UN과의 접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협력도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SDGs가 아직 한국의 정책 전반으로 흡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신** 각국의 상황에 따라 SDG16을 이행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국별 이행현황을 살펴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훈** SDG16에 대한 여러 접근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빼기(-)’나 ‘나누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빼기(-)’는 SDG16의 12개 세부목표 가운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 또는 자국의 맥락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식적으로 SDG16 세부목표 중에 3개만 이행합니다. 우리나라도 16.8(글로벌 거버넌스)을 뺐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련이 없다고



**SDG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나누기(÷)’는 SDG16의 3개 영역(평화, 인권, 민주주의) 중 하나만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하기(+)’의 접근법도 있습니다. SDG16은 SDGs 전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6.b가 ‘비차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SDG5(양성평등)는 성차별, SDG4(양질의 교육)는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SDG3(건강)은 건강에서의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하기)’는 SDG16을 앞의 다른 목표들과 ‘더하기(+)’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접근법입니다.

‘곱하기(×)’ 접근은 경제, 사회, 정치적 불평등이 서로 연결돼 있는 SDG16의 범분야(Cross-cutting)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SDG5(양성평등), SDG10(경제적 불평등), SDG16(정치적 불평등)을 엮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불평등을 정치, 경제와 분리해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Beyond SDG16’ 접근법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이 겪은 전쟁으로 인해 남아 있는 대인지뢰와 불발탄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SDG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SDG18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SDG18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과 물리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분단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 되니까

SDG18을 만들어서 비무장지대(DMZ)나 대인지뢰 등의 이슈를 남북이 함께 협력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SDG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K-SDG를 만들며 SDG16의 세부 목표 중 16.8을 삭제하고 대신 ‘남북협력’, ‘디지털 분야의 인권(Digital rights)’이라는 2개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인권 규제가 없었어요. SDGs는 MDGs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DGs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SDGs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의 관심은 4차 산업혁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직 별로 없기 때문에 UN 의제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ㅣ김명신** SDG16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식도 참 다양하군요.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SDG16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ㅣ이성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대부분 SDGs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곳은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SDGs 협상에서 SDG16을 굉장히 지지했던 나라고, 이후 SDG16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9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現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투명한 거버넌스, 특히 시민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인도네시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SDG16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SDGs 정부 보고서를 낼 때 시민사회와 함께 발간합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 지난 4년 간 SDGs의 17개 이행지표를 만들고 국별 전략을 만드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돌아봐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훈** 사람들마다 SDGs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SDGs는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올해 첫 번째 주기가 끝납니다. 문제는 2015년 SDGs를 만들었던 주체와 지금 이를 집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과 각 회원국에서 SDGs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SDGs를 기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국내 이행 보고용으로만 생각하고, 애초 SDGs가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SDGs가 여전히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발전목표(Development Goals),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리우 환경회의에서, 발전목표(Development Goals)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유래했죠. 결국 환경보호와 빈곤퇴치가 만난 것이 SDG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처럼 ‘빈곤퇴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환경운동, 지방의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국제기

구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SDGs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대중적인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SDGs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원인은 기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죠. SDG11(도시화)과 SDG12(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의 영향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려면 SDGs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기후변화는 수영 세계선수권대회이고, SDGs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모두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선수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경기와 전 분야의 선수들이 함께 뛰는 경기 모두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 혹은 특정 분야의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활동하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SDGs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SDGs는 17개의 복잡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목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SDGs의 각 목표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연결고리를 찾아 함께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SDGs 각각의 목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서로 모순되는 목표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SDG8(일자리), SDG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와 SDG12(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목표로 보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이성훈** 맞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은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DGs에 집단지성이 담겨있다고 보는데, SDGs가 SDG5(성평등), SDG10(불평등), SDG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SDG17(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곳곳에 범분야(cross-cutting)적 주제를 집어넣어서 충돌을 예방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기 전에 성, 사회, 환경, 인권 평가를 해서, 정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예방책을 만든 뒤에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제 명분은 좋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 평가를 하고 검토한 후에 정책이 들어와야 합니다.

SDGs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SDGs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SDGs의 각 영역이 자기 것 하나만 하다 보니 계속 충돌

이 생기죠. 악순환인 거예요. 아직은 첫 번째 주기라 국제기구나 회원국 모두 계획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이전의 것을 반영해서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SDGs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SDGs가 복잡하고 한 사람이 모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역할을 배분해서 영역별 전문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끝장토론’ 하듯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인식한 뒤에 연구보고서도 쓰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김명신**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민 각자의 이해와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SDGs는 여전히 개인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성훈** 저는 SDGs를 교육할 때 참가자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를 3가지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족이나 커뮤니티, 직장,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일 3가지를 적어 보라 합니다. 그러면 ‘미세 먼지’, ‘우리 동네를 걷는 게 불편하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 불안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 다음에 SDGs

를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SDGs를 어떻게 해보라고 개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을 먼저 정리하고 SDGs와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SDGs에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SDGs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신** 국내의 SDGs 및 SDG16 이행의 촉진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떤 기여를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성훈**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다루고 있잖아요. 저는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바깥으로 끌어내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학교 안의 지식으로 갇혀있어요. 자기 일상의 고민들과 삶을 SDGs와 연결하는 교육들을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10대는 더 이상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SDGs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SDGs를 친숙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도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시·도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수업



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SDGs가 지자체의 정책으로 발전  
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가 주도로는 SDGs의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인 상황에서, SDGs의 이행을 보다  
가속화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이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주체가 바로 의회입니다. 국회가  
SDGs를 알아야 적절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국회  
의원 가운데 국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에게 SDGs를 많이 알  
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스스로의 역할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 분단의 마음, 평화의 마음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입니다.

분단과 폭력에 간혀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마음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 성별과 성별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마음을,

어떻게 평화와 소통의 마음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김명신** SDG16은 12개의 세부목표 가운데 3개가 폭력의 감소와 폭력의 종식, 폭력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력을 없애는 것이 SDG16의 달성에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없애고자 한다면 폭력의 의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SDG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SDG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김성경** 사실 ‘폭력’이란 정의되기 어려운 광범위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비폭력’이나 ‘평화’라는 개념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폭력이란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물리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이나 비가시적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세분화된 방식으로 폭력을 정의하는 순간, 평화의 영역도 넓어지게 됩니다.

폭력의 개념은 사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고문처럼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문화적인 폭력에 대한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

습니다. 성 정체성이 다양화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그 예일 수 있습니다. 남성 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 중 어느 쪽에도 가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처럼, 어느 한쪽의 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폭력도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평화에 대한 논의도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 폭력 이면에는 항상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의 배경이 되고,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법, 미디어, 담론 등이 문화적 폭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ㅣ김명신**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수많은 폭력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폭력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ㅣ김성경** 폭력이라는 렌즈로 한국 사회를 보면 과거에 비해 진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폭력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 내고 있죠. 다만, 폭력에 대한 논의를 한국 사회가 소화하는 방식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극단주의가 너무 심하게 사회 곳곳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민주화 대 권위주의’와 같은 커다란 대립을 제외하고는 극단주의가 만나는 지점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영역에서 극단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페미니즘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이야기되지 않았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미투’운동과 함께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미니즘 내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radical feminist)라고 불리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젠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급진적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주는 방식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되니까, 크게 한 번 꺾으면 예전에 ‘10’이었던 게 ‘20’정도까지 단숨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싸우는 방식은 사실 스스로에게도 힘든 방식입니다. 매일 밤 사이버 세계에서 소위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 누군가와 싸우면서 본인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접근은 비폭력적인 해결 방식으로 갈등을 전환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방식입니다.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어느새 폭력을 자기 안에 내재화하게 됩니다. 여성계 내에서도 함께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여성들을 덜 개화된 사람으로 치부하는 생각들이 강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극단주의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명신** 젠더 문제 외에 함께 짚어봐야 할 문제들도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경** 세대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세대 이야기를 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몰타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1대 99’의 싸움이 아니라 ‘30대70’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 대부분을 흔히 ‘386세대’라고 일컫는 특정 세대가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구조 자체가 점차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정규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정규직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과 계속 싸웁니다. “노동력이 없고 새로운 노동력

유입이 안 되니까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 임금을 계속 높이  
자”고 목소리를 높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대들은 전혀 노동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1명의 부장급이나 정교수를 유  
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20  
대들은 직장이 없으니 사랑을 포기하고 아기를 안 낳고, 그러  
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단순  
히 계급 문제가 아니라 세대 문제와 연동해서 구조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  
다. 세대 간의 갈등 역시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명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특히  
집단 대 집단으로 나뉘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근본  
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김성경** 우리 역사를 돌아켜봤을 때 분단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 분단, 냉전이 한국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대부분의 극단적인 사고와 비정상적인 구조들을 만들  
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  
째 문제인데,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이 되었  
기 때문입니다. 분단과 전쟁을 겪고 남북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빠르게 성장하는 문제에 비해 공동체의 가

치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구조 속으로 내몰렸고, 대부분의 부와 권력이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분단 이후 이분법적 논리로 구축된 사회 내에서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편가르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분단이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강도와 밀도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기점마다 분단이 미친 영향력이 약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분단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분단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큰 다름이나 갈등만 없다면 지금처럼 남북이 각자 따로 사는 편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경** 통일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남과 북의 생각도 너무 다르니까, 일본이나 중국처럼 다른 나라로 살아가자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만 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 사회의 비틀어진 구조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형태가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분단을 완전히 극복하는 방식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형태를 만들어야죠.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 갈등의 씨

얕은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분단이 해결되지 않고는 3대 독재방식의 구조가 극복될 수 없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재가 조금씩 나아져서 잘 먹고 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분단 극복은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명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다양한 남북통합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독특하게 ‘남북한 마음의 통합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마음 연구에 주목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성경** 현실을 볼 때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사람의 마음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같은 맥락에서 남북의 정치·경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도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을 전환하여 통합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과 끝이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북통합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사

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작동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이겠죠.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남과 북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서로 맞춰가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에 꽂혀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마음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 성별과 성별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마음을, 어떻게 평화와 소통의 마음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은 신기하게도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문제에 대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과거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마음의 역사성을 직시하는 순간,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극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해한다면, 그분들을 몰아세우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다른 방식의 통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 중 일부는 ‘개혁·개방해서 우리도 중국만큼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곳에도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가족을 잃고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당수의 노인 세대가 있죠. 이분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치유하고 전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김명신** 마음의 역사성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인 부정적인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쌓인 기억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이미 쌓인 부정적인 마음을 충분히 덮고도 남은만한 긍정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경** 맞습니다. 적대하고 분열하고 서로 대립해 온 것보다 몇 배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마음 안에는 현재적 경험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현재적 경험의 렌즈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현재의 변화를 믿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와 소통도 필요하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하는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는 식의 괴담이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이야기들에 활용

되고 있죠.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신** 그렇다면 마음의 통합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김성경**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이입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의 입장에서 서 보고, 여성도 남성의 입장에서 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서 보는 태도와 능력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감정이입을 하고 난 다음 단계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영어로 'Sympathy'인데, 'sym'은 같이 하는 것, 즉 '공명'을 말합니다. 공감을 하고 난 다음 단계는 동감인데,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명신**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공감해야 한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공감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르신들은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더 힘들어요”라고 말하면서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경** 그렇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청소부께 못되게 굴었는데, 그분이 없으면 당장 내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는 것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김명신** 마음 통합의 가장 높은 단계를 상대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김성경** 접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남한 주민들이 개성공단 등을 갔을 때 북한 주민들에 대해 안 됐다는 마음도 가지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직 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한 번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이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한국 사회에 변화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ㅣ김명신** 비록 부침이 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남북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과 북의 주민들도 자연스레 만남의 기회가 늘어날 텐데요. 과연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키울 수도 있을 텐데, 남북 주민 간의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ㅣ김성경**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에 성숙한 의식이 형성되었을 때 건강한 만남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민족 담론으로 뭉뚱그려서 남북의 주민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중에 북한에 대한 애정과 민족주의적인 마음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만나는 분들은 오래 못 버티곤 합니다. 오히려 엄청난 실망과 오해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반대

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일까’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온 선생님들은 비록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주민이 만나면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파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인류 문명도 이러한 끊임없는 접촉과 갈등을 거치며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니까요.

개성공단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북 주민들 사이에 처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계와 서열이 있었고, 관리자는 한국 남성이고 노동자는 북한 여성이고, 젠더 문제나 계급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내보고 나니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라고 알게 되고, 상대방 역시 남한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시장을 펼치고 공장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변화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낯선 만남이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에너지가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명신** 남북 주민 간 만남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국내에는 약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북에서 오신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이주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경**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있었고요.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양상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내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중국으로 나왔다가 한국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요. 흔히 탈북자 대부분이 남한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출신의 상당수는 해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를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북한의 이주민들도 다층화된 이주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모두를 북한 체제의 결함에 불만을 갖고 있는 반(反)체제 인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이주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한국 체제를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듯이 말이지요.

북한 주민의 이주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이주의 여성화입니다. 평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약 71%가 여성인데,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공식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유동성이 큽니다. 결혼이주, 성 착취, 서비스산업, 돌봄 노동 등 전형적인 젠더화된 이주 네트워크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이주하기 더 수월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김명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주하는 모습이나 이주의 여성화는 현대 이주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김성경** 맞습니다. 특히 결혼이주는 전 세계에서 가부장제의 득세를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의 남성이 자신의 국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의 여성과 결혼하는 거죠. 비혼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제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은 자기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낮은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타국 남성과 결혼하죠. 한국의 경우 농촌 남성이 국적을 이용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여성과 결혼하죠.

돌봄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의 여성들이 그 일을 다른 사회구성원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다른 나라의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여성이 여성을 착

취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글로벌 체인이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그 체인의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은 북한 여성, 특히 북한 출신의 불법 체류 여성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 출신 불법 체류 여성은 가장 나쁜 수준의 노동 조건 속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 얼마 전 서울 관악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주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죠. 그게 분단국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탈북자 분들이 그만큼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사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도움을 요청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도를 잘 만들어 두었으니 어려울 때 신청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SDGs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사회복지 커뮤니티 안에서 이미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

니라, 단 한 명이라도 커뮤니티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늘어나야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하겠죠.

**김명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역차별’일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평생 살아온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북한이탈주민부터 도와주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김성경** 역차별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이는 남한 사회에 전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주민들과 출발선을 같게, 최소한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수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역차별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만드는 단어죠. “누구를 지원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n분의 1’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문제가 적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개개인들의 삶이얼만큼 힘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계각층의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한 자리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뜻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평화 담론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 담론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나 성찰이 필요할까요?

**김성경**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내에서 평화는 현 정권에서 말하는 ‘평화, 번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윤리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상태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평화롭게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담론이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북한 주민들과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북한에 인프라를 깔아서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것인가’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만 찾아오면 20대도 모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노동조합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갔는데, 그곳 연구원이

‘본인들의 정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구조의 가장 아랫부분을 맡아 줄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본인들의 일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집단주의적 성향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의 기준을 유지하는 한 방향으로 북한과 평화를 대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평화, 동물과의 평화, 소수자와의 평화 등 다양한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현재의 ‘브레이크 없는 성장주의’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명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또 다른 점은 민족주의의 부상입니다. 남북의 만남과 일본,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족 담론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 김성경**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은 “동아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족주의로 보는 것은 서구적 잣대로, 민족주의를 무조건 배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탈식민주의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가능성, 제국과 식민에 대항하고 내부의 공통성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다. 사실 민족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우리 모두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남북이 합쳐서 타국을 배격하지는 논리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정체성과도 연결할 수 있는지, 열린 방식의 민족주의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는 민족주의만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고 소위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민족주의는 오히려 사회 내 차별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리더들은 한 쪽으로 쏠리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대신 균형을 잡는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합니다. 유네스코가 더욱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민족을 '정체성 중 하나(one of)'로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 김명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성경** 교육이 중요합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교육사업들을 유네스코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적 맥락’을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비교적인 맥락’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평화의 마음을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과 다른 동아시아 국민들을 연계하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는 데 훌륭하게 기여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한국 사회 내에서 윤리성을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 경계를 넘는 삶과 인권

이항규(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접근보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통해 그들이 떠나 온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명신** SDG16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다양한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SDG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16.3.**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SDG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이향규**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주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고 하면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의 비중이 3~5% 이상 정도인 사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주민의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보다는 ‘다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라는 말을 이주민과 관련한 문제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각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신**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인식을 돕기 보다는 누군가를 규정하고 차별하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안적인 이름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향규** 말이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을 쓰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호명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이미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을 새롭게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저 또 하나의 이름만 새롭게 만들어낼 뿐입니다. 저는 ‘다문화’라는 말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 다문화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를 바꿔보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해 보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명신**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겠지만 제도를 통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SDG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싶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2011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는데요. 다문화·이주노동자 가정, 탈북자 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이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향규** 문화를 바꾸는 것과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마땅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강제적인 법적 장치는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혐오발언 등을 규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장치가 만들어지고 그 규범이 지켜지면, 어떤 차별에도 반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만으로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역, 학력, 성적지향 등 특정 영역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정서상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명시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포용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김명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 이향규** 다문화사회, 특히 다문화교육에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10년 후에 훨씬 더 큰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에서 다문화주의의 최대 논점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교육과정의 문제죠. 그저 ‘더불어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한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 반에 스무 명이 중국인 학생인 상황에서 병자호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일본 아이들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교실에서 일제 강점기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베트남계 아이들이 20%인 교실에서 베트남전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한국인이 쓴 한국 문학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베트남 시인의 시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은 언어가 되고, 국사 과목은 역사가 되겠죠. 저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 비로소 다문화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 봅니다. 이주민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질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다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면,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 낯선 곳에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되겠죠.

**김명신** 지난 10년 동안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10년의 노력에 비해 성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향규** 자신의 삶이 편안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타인에게 관대해지죠. 어쩌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들 그렇게 느끼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보다 더 불쌍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더 착해져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반성하게 만드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데 타인을 이해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권이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런 접근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 그렇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향규**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시집 온 이주민 여성에 대해 ‘힘들겠다’ 내지는 ‘도와주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고 자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트남’에 대한 궁금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이 나고 자란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왔으니 힘들겠다’가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온 그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지리에 대해서 배우고, 북한의 일상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니까요.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항상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접근은 시혜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기회로 해서 그들이 떠나 온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좋

겠습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단숨에 풀어내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당장 잘 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야단치거나 다그치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도 그런 고민을 하는군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들은 사실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랍니다. 이걸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봅시다”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김명신** 북에서 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항규** 저도 한때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범주에 같이 묶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두 집단이 겪는 어려움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에 대한 지원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비슷하다면 지원도 한 데 묶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아해보면 두 집단이 갖는 문제의 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은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많은 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점들이 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의 동질성은 우리가 인식하는 차이점보다 훨씬 더 크죠.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감안할 때, 북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만큼 우리가 다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원’이라는 틀에 맞춰서만 생각했던 점을 뒤늦게 반성했습니다.

**김명신** 한국으로 새롭게 온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적인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이분들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SDG16.9.**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향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선주민의 배려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구성원들의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출신이 지자체 행정기관이나 의회,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주민이 민주주의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수록 다양한 구성원이 문화적으로 풍부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할 길이 마련될 것입니다.

**김명신** 한국사회에 새롭게 정착한 이주민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사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SDG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데요. 그렇다면 모든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향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차별적인 행동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신념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표현이 공공의 복지에 위협이 된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합리적인 토론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조정해나가기 보다, 비타협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자를 공격하는 일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신** 최근에는 비슷한 성향의 집단끼리는 뭉치고 자신과 다른 성향의 집단과는 대립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향규** 이를테면 평행선의 사회(Parallel society)라고 할까요.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며 만나지 않는 겁니다. 만나면 불편하니 애초에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죠. 각자 자

신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여성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인권을 지켜준다고도 합니다. 자신과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해지면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자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죠.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만남이 단절됩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횡단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이런 사회를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이전 세대와 소통하지 않는 사회, 내가 나의 자식과 소통하지 않는 사회를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는 앞선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조언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제주 4.3항쟁’ 발표에서 ‘기억의 자살’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떤 종류의 기억을 용납하지 않으면 기억은 자살한다. 제주에 대한 기억이 생존자들에게 그러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은 자살할 뿐만 아니라 ‘자연사’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기억은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면서 사라져 가는 기억이 어떤 식으로든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남는 과정을 화해의 과정으로 가꾸어 간다면 세대 간 갈등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립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향규** 이념의 과잉은 아닐까요? ‘당신은 좌파인가 우파인가’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누군가 ‘정치가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 몸이 아픈 이유가 정말 암세포 때문인지, 사실은 감기 때문인데 어떤 이유로 나 스스로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과연 나와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 자식 간 대화를 단절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요?

저는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어찌면 자신이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선택이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혹은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세대 간 대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신**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향규** 유네스코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물망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유리한 조직이잖아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혼자 다 하려 하기보다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분야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연결해주는 허브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활동이 국제사회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나서서 그 분들의 사업이 갖는 의미와 맥락을 짚어주고 인정해준다면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의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았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처벌의 내용이 피해자와 공동체를 얼마나  
회복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의의 궁극적 목적이 피해의 회복이라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저 관중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김명신** SDG16은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있습니다. 흔히 정의라고 하면 ‘권선징악’으로 상징되는 사법적 정의

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정의의 실현 못지않게 사회, 문화적인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SDG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이재영** 저도 자라면서 정의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봐도 성경을 봐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처럼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정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가해자를 처벌하면 피해자는 회복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죠.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화 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보다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는 정의, 즉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신**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비교해서 설명해볼까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모두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이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이 중심이죠. 하지만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았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처벌의 내용이 피해자와 공동체를 얼마나 회복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담당하는 제3자 그룹의 힘이 강해져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법, 제도 등의 권위가 강화되고, 그 결과 엄벌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 간 대화와 자발적 해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강제성보다는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응보적 정의는 권위적인 사회에서 더 강한 힘을 갖고, 회복적 정의는 보다 참여적이고 자

올적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적 정의가 응보적 정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존의 응보적 정의를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긴장과 보완의 역할을 나눠가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갈 때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제3자의 개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과거에는 힘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됩니다.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접촉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혹시 다치지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묻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고가 나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고 하면 네가 손해 본다”고 배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친 일인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보험회사를 부르는 것이 일상화된 거죠. 우리 사회의 제도,



매뉴얼, 절차, 법의 수준은 많이 올라온 데 비해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이런 풍토가 사회지도층에서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법만 어기지 않으면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는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적 책임만 지고 나면, 법으로 처벌을 다 받았는데 왜 자신을 욕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야기한 피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공동체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김명신** 흔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터지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형량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주목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거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책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책임’은 민주사회로 가는 핵심입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분쟁 사례에 개입을 하다 보면, 사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그 외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의 타인화 현상이 세대를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건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공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직접 갈등을 경험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를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 속에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 김명신** 말씀해주신 회복적 정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2019년 현재 우리 사회의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 이재영**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죠. 안타깝게도 그 뿌리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근현대사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모두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대부분의 나라는 과거사 청산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과 미국, 소련의 냉전체제 영향 때문에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Charles André Joseph Marie de Gaulle)은 강력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응보적 정의를 이루면서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시 프랑스에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죠. 바로 과거사를 강력한 응보적 관점에서 다룬 대표적 경우입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Nelson Rolihlahla Mandela)은 1995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인종분리 정책으로 저질러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가해자들에게 사면을 베풀고 피해자들을 회복하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적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응보적 정의 관점의 과거사 청산마저도 이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불씨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심한 역사갈등과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를 다시 돌릴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멈춰버린 역사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흐름 속에서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자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재영** 미래 어느 시점엔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분단된 민족이 어느 시점부터 단순히 미래만 이야기하고 새 출발 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난 일은 덮어놓고 가자”는 등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커지며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결국 분단체제에서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챙겨온 역사와 민족 앞에 진짜 진실과 책임져야 할 사람

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거사를 어떤 기준으로 돌아보고, 어떤 관점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신** 언젠가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재영** 그렇죠.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과거사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가해의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법적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의 정점에 있던 사람에 대한 응보적 정의만을 외치면 그가 죽은 뒤 아무런 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가해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 비극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지금도 1만 명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침묵 속에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가해자였지만 또한 국가폭력이 길러낸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소수의 양심선언도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사람마저도 나올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

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준 적이 없던 겁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식의 분위기가 가해자들을 다 숨게 만들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도록 해 버린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 진실이 밝혀지면 응징이라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접근은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진실의 욕구마저도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양심적으로 참회하려는 사람들마저도 죽을 때까지 함구하며 비밀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역사적 진실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어려운 과제는 피해자들의 손에 남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ㅣ김명신** 명령에 따르는 군인의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시민을 죽이는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 있지 않을까요. 자칫 양심선언을 통해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ㅣ이재영**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나왔든, 진짜 반성해서 나왔든, 저는 ‘과거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정의가 받는 비판

중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soft punishment)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직면 자체를 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잘못된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전 사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처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면하려는 사람이 드문 거죠.

저는 과연 응보적 정의가 엄벌을 통해서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밝혀 왔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보다 진실을 추구했다(Truth over justice)’는 이야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받던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응징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 사회가 지금 수준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을 고백하면 모진 처벌을 받는데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쪽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다 보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명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할 텐데요.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ㅣ 이재영**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이 옳고, 가해자가 처벌 받으면 자신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외침 속에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미 외에도 수많은 요구들이 함께 깔려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처벌해주세요”라는 말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내게 생긴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 달라, 나의 억울함을 알아 달라,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 달라, 나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달라, 내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회복해 달라 등등의 수많은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도 그런 의미에서 던지는 외침인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그저 처벌해 달라고 했으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는 자기가 외쳤던 그 많은 요구 중에 한두 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채워가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리고요.

한 아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을 해서 아버지가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2~3년 지난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재판이 끝난 뒤 그 아버지는 “재판할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재판 중에는 ‘가해한 아이들이 잘못했다는 것과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형벌이 내려지고 나니, 본인은 이제

목표도 없고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욕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피해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무슨 정의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처벌해 달라는 말 안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요구가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처벌이 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뿐더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요구의 일부만 채워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을 열심히 만나서 직접 자기 표현을 하는 게 본인의 치유와 본인의 욕구를 더 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명신** 만약 가해자가 자발적 책임을 질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재영** 피해자가 회복하도록 돕는 게 정의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뒤편에는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몫이 남아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를 정의의 세 주체로 봤을 때, 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의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공동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 처벌이 목표인 정의에서는 가해자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또는 가해자를 벌할 수 없을 경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회구성원이나 공



동체의 의미 있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그저 관중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명신** 지금까지 다양한 갈등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현장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재영**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학교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 기관이 사법화 되어 소송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스스로를 ‘학교폭력전문’으로 광고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때 처음부터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게 좋다는 식입니다. 법이라는 게 전문영역에 속하다 보니, 자신이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변호사가 학교 문제에 뛰어들지 않았던 시절에는 학교 현장이 대혼란이었는데, 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에는 구성원들 사이에 작동하는 제도와 문화가 이미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마저도 사법 현장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국 학교라는 교육기관보다 사법시스템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매우 안타까운 문화가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의 갈등해결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결국 미래 사회의 방향을 결

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학생이 싸웠을 때, 회복적 대화 모임에서는 반 전체 아이들과 선생님이 둘러앉아서 두 아이의 싸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줬고, 무엇이 불안해지고 걱정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앞으로 무슨 노력을 하면 좋을지, 반 공동체 아이들은 앞으로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도 나에게 질문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친구들이 잘 지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리겠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싸우는 아이들을 말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변 아이들은 모두 관중이었죠. 누가 싸우고 오면 얼마나 맞았냐고 물어보고, 힘 없는 아이들은 악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 있고요.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고 모두가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래 압력’을 통해 평화로운 학급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몇몇 아이들 간의 다툼에 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학급 전체가 평화를 배우게 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어야 하고요. 한 번의 위기를 교육의 기회나 회복의 기회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라는 틀로 나오면 이런 경험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걸러지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정의를 가르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ㅣ 김명신** 최근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여러 단위에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ㅣ 이재영** 응보적 정의는 분명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했어요. 시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곧 정의의 한계로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게 되면서 그간 꼭 필요했던, 모자라다고 느꼈던, 궁금해 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의를 1차원으로만 보았는데 이제 3차원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회복적 정의가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이상적이라거나, 회복적 대화모임 같은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이끌 진행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무작정 수요를 늘여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적 정의에 대한 무용론과 함께 위험하거나 불안하다는 식의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복적 정의가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확산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먼저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그것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 곳곳에서 실천할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많

이 나와야겠죠. 만약 회복적 정의가 상식화된 사회라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죠. 우리는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회복적 정의를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가와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재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은 국가 대 개인의 문제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종차별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든 갈등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대담론보다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어디에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 핵심은 피해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전문가이신 한 일본교수가 “만약 일본인들이 회복적 정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과거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뀔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본인이 갖고 있는 체면과 명예에 더해 정의의 개념이 응보적 정의다 보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수치스럽고 낙인을 찍는 과정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 자체가 수치스럽고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과거를 반발하고 부인하는 힘을 더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인들이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자신이 입힌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기초를 만들고, 그런 태도를 더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에도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떠올려보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역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과거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국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속에 사람들의 관계가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재영** 예나 지금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은 국가 대 국가로 나뉘어 과거사 청산과 정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저는 과거사를

다뤄 왔던 우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없다면 결국 모두가 더 큰 대립과 갈등의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시아에 깨어있는 시민, 성숙한 세계시민의 수가 많아질수록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민감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국가 간 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들도 있지만, 국경을 넘어 우리가 동아시아인으로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이나 동아시아인과 같은 개념에 더 자주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조국, 나의 나라’를 우선시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역사를 통해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국가 대 국가로 나뉘어 대립하는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반목과 대립이 계속된다 해도, 그 안의 시민들은 시야를 더 넓히고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 김명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의식, 책임, 민주성 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저는 그런 주제들이 일반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남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일상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정의도 처음 들어보면 전문적 영역 같지만,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들 때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국가 간의 과거 갈등은 어떻게 풀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경험들이 하나의 담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 평화, 통일

정성현(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

우리 사회는 생명의 위기와 사회 해체의  
위기가 겹쳐진 합병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 인간과 인간(남북)의 평화,  
나 자신의 평화를 통합한 평화의 개념과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실천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명신** SDGs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간과 자연 간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17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SDGs의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정성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잘 만들었지만, 그 말이나 내용이 서양식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전달해야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생명 사회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인간 사회의 이야기만 해도 되겠죠. 하지만 벌이 멸종되면 5년 뒤에는 인간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가히 ‘생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국민 총동원’ 방식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단순히 환경오염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한 과정에서, 자연 파괴 역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붕괴입니다. 모두가 돈벌이를 향해 계속 내달리다 보니 곳곳의 공동체가 금이 가고 깨져 버렸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중 3분의 1이 가족 간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깨진 거죠.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체 살인사건 중 20% 가까이가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다른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면서,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오로지 돈만 믿게 되어 버린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생명의 위기와 기본적인 사회 해체의 위기가 겹쳐진 합병증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기후의 위기와 사회 해체의 위기가 합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는 고열증에 시달리고, 사회는 돈 때문에 과열증에 시달리는 합병증에 걸린 상황인 거죠.

**김명신** 생명이 위기를 맞고 공동체가 붕괴되면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는 꿈도 꿀 수 없겠죠.

**정성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토대는 자연, 즉 하늘과 땅과 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 즉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에는 관심을 갖지만,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와 인간에 의한 자연 착취가 겹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이나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유를 해야 해요. 모두가 병이 들었어요. 개혁이라는 건 살갓을 바꾸는 것처럼 힘든 고통이 있는 것이지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힘에 의해 잠깐 눌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었는데 같이 고쳐보자. 병이 덜 든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처방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치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명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과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 정성현** 물론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사회변화만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통합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변화는 계속 요구하면서 개인의 욕망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기 위해서는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지속가능발전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세상에

끊임없는 성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성장을 전제로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하면서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대부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입니다. ‘술(術)’에 매달리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부터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도(道)’의 문제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면, 그에 맞게 도(道)와 술(術)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道)가 없는 술(術)은 위험합니다.

**김명신** 생명과 공동체의 위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한반도의 평화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이 싹트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평화의 지향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현** ‘평화’가 뭘까요? 각자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핵화를 한반도의 현상적인 평화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과 단계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평화의 이 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하는 DMZ평화생명동산에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연다”는 구호가 있습니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생산·유통·소비·폐기하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고집한다면 2040년대 중반 즈음이면 지구 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후에는 인류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한들 어디에 쓸 건가요. 지켜야 할 사람도 없고, 공격할 나라도 없어요. 생명이 절멸되는 위기 앞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무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통일, 평화, 생명”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저는 “생명, 평화, 통일”의 순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 인간과 인간(남북)의 평화, 나 자신의 평화를 통합한 평화의 개념과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실천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명신** DMZ평화생명동산을 이끌어 오신지 20여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한반도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관계가 풀릴 때



면 어김없이 DMZ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곤 합니다. 한반도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앞으로 DMZ는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까요?

**정성헌** 꿈을 크게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DMZ의 폭은 남북이 각각 2km, 4km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이 합의해서 이를 남북으로 20km씩 넓혀서 40km로 만들고, 국제단체들과 협력해 온갖 생물들의 복원과 자생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생명사업을 남과 북 그리고 세계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전문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면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할 때도 남북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지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뢰를 캐러 오는 사람들이 5달러, 10달러씩 내고 자발적으로 와서 캘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DMZ 안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평화촌’을 건설해 보면 좋겠습니다. 휴전 50년이 되던 2003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남북 양쪽 20개국 사람들을 모두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 13개국에서 주로 병사 출신의 사람들이 왔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참전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자 되는 게 전쟁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대화를 해서 지더라도 평화에서는 반드시 이기십시오”라고요. 그리고 중국 의용군 대

표로 온 한 참가자는 “지나고 나니까 애꿎은 인민만 많이 죽인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화해했습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또 어떤 변화가 새롭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면 그 이상도 조금이나마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신**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언 부탁드립니다.

**정성현** 우리 청년들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급변하는 과학기술 등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정직하게 근본과 기본과 현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안 나옵니다. 올바

른 견해를 갖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식인과 정치인, 종교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현재의 사회제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세상 탓만 하고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틀렸으면 세상을 고치겠다고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생명 가치를 더욱 많이 생각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생명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제4의 물결’, 생명사회(Biosociety)가 2030년에 본격화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극복하기 위한 힘을 기르도록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

###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6.1**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16.2** End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 16.3**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16.4**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strengthen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ssets and combat all forms of organized crime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16.5**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 16.6**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 16.7** Ensure respons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6.8** Broaden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16.9** By 2030, provide legal identity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16.10**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16.a** Strengthen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capacity at all level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event violence and combat terrorism and crime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16.b** 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SDGs 해설서 시리즈

---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  
: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2018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7』  
: 우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2017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1』  
: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 2017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4』  
: 우리의 지속가능한 해양, 2019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5』  
: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2018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ISBN 979-11-90615-0-6

보다 높우로